

“지방이전 눈치보는 공기업, 쫓기 박겠다”

■盧대통령 광주·전남 경제인 오찬 간담회

‘제 2단계 균형발전’ 대선판에 내놓고 추진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2단계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 “(기업이) 지방 가면 비용이 훨씬 줄도록 세금, 인건비 확실히 줄여주고, 또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주려고 지시했다”며 참여정부 임기중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입법과 추진을 밝혔다.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온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급년 1·4분기가 되면 (정책 입안)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늦었다”며 정치권 설득을 통한 대선전 입법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계산을 딱 해보면 ‘2010년 경에는 보따리 싸서 (지방으로) 가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2차 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감액해주는 방안이 골자이며,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한 1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골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의 내부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영거주층 눈치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쫓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이 본사 매각에 난색을 표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에 거부감을 나타낸 데 따른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낮 광주 하남산단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광주·전남 경제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성경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광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외에 지역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성경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광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외에 지역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시설

盧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의지 제도화 해야

5·18 민주화운동 제 27주년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온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전남 경제인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 다시 한번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꼭대기만 아니라 몸통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쫓기를 박아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다.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차기정권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혁신도시 건설의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법제화를 서둘러 확고한 기틀을 다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의 6월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도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차기정권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영남권과 호남권 등 지역간 차별과 격차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화합과 통합

보조금 빼내 개인 잇속 챙긴 사회복지시설

전남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국비나 도비 등의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최근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등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122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모두 277건을 적발했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개인의 잇속을 챙겼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심각하다. 한 노인요양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수용된 노인들에게 정량의 밥을 제공하지 않고 양곡구입비와 유류대 등을 빼돌려 회식비와 직원 수당으로 사용했다. 아동복지시설 사무국장도 설이나 명절 때 담지한 위로금을 유용해오다 3개월 정적 조치를 당했다. 관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시설도 적지 않았다.

영, 인권 침해 등은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사회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남도의 이번 감사에서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이 적발돼 문책을 받았다.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큰 취약 분야이지만 감사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진 뒤 ‘앞으로 사용했다. 아동복지시설 사무국장도 설이나 명절 때 담지한 위로금을 유용해오다 3개월 정적 조치를 당했다. 관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시설도 적지 않았다.

“국립 뽀 문화전당 광주만의 랜드마크로”

김종민 문광부장관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만 있는 랜드마크로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 참석 후 문화중심도시 조성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스페인 빌바오시는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를 지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면서 “광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건물을 지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광주의 문화가 세계로 발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의 설명을 들은 뒤, “문화전당이 광주에만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힘써 달라”면서 “사람이 와서 활동을 해야 이를 토대로 광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야 정치권 ‘5·18 광주’ 총집결

5·18 기념식 참석...대선 앞두고 각 당 지도부 필승 결의 다져

정기권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민주화 성지’ 광주로 총집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한영 최고위원,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 나경원 대변인, 이종구 제1 사무부총장, 전재화, 원희룡 의원 등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범여권은 5·18 정신의 키워드가 통합이라는 점을 앞다퉈 강조하면서도 서로 호남의 계승자임을 부각시키는 등 통합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등 당 지도부와 당직자 30여 명은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의 모임인 ‘70동지회’와 조찬을 가진 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2007년 5월 광주의 명령은 통합이다.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협력의 관계로 전환해야 할 남북의 미래도, 치유돼야 할 사회갈등도, 평화개혁세력의 역사도 키워드는 통합이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도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날 광주로 내려가 5·18 추모관을 방문한 뒤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광주·전남시도당 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전남 5·18 국립묘지에서 당 자체 기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 민주당이 중도개혁세력의 주체로서 통합과 연립 대선승리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박상천 대표는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을 통해 대선승리를 이뤄내 5·18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정권을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범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천정배 의원,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한명숙 전 총리, 손학규 전 경기지사(왼쪽부터)가 18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 한 극장에서 열린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 발표회에 참석,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위정환 기자 jrwi@kwangju.co.kr

千·鄭·韓·孫의 조우

민노당 새 의원단대표에 천영세 의원

민주노동당의 새 의원단대표에 천영세 의원이 추대됐다.

민노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임한 권영길 전 의원 단대표의 후임으로 천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고 김성희 부대표가 밝혔다.

천 신임 의원단대표는 2004년 4·15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 초대 의원단대표를 지냈다. 그는 “개혁과 민생의 소임을 다해 대선과 총선 승리에 밀려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공기업 임원 외유 가지 마라”

행자부, 지자체에 권고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100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임원과 관련된 모든 해외출장을 전면 유보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광주·전남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해외출장도 유보됐다.

박재영 행자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18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모든 외유성 해외출장을 전면 유보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면 유보 대상은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상근이사, 감사 등이라고 박 본부장은 전했다. /채희종기자 chae@

빛의만평

- 김종두

100만원도 못 버는 예술인이 있다

“도급하한제, 호남권 3천억원 수주 효과”

이용섭 건교, 호남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 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또 건교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호남지역 건설업계에 연간 3천억원 이상 수주 물량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용섭 건교통무 장관은 18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호남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는 미리부터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건설업체가 원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와 손잡고 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돼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도급하한제도 개정고시 등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호남권 3천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 물량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역건설업계의 여수 엑스포 유치지원을 위한 지역 SOC 확충 건의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양~적곡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은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제출하고 지난 2003년 착공된 순천~여수간 철도개량공사는 금년말까지 54%의 공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선 전철화사업 구간을 오는 2011년 여수까지 연장해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도내 복지시설 관리·운영 ‘엉망’

국·도비 보조금 개인 유용 등 전남도 122곳 감사 277건 적발

전남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 달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인 시설 122곳에 대해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법인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해 모두 277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94건, 주의 183건 등 277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업무처리

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을 문책토록 했다. 도는 양곡구입 대금을 유용한 H군 A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파면 권고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유용액 3천900만 원을 회수조치 했다.

또 설과 추석 명절 위로금을 유용한 H군 B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정직권고 했다.

이와 함께 양곡구입 대금과 유류대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사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M, G, J 시·군 시설 등에 대해서는 모두 6천772만1천원을 회수토록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의협비리’ 장동익 前 의협회장 사전영장

검, 고경화·김병호 의원 소환조사

대한의사협회의 정지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15, 16일 각각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의사협회비와 회장 관공비, 의정회 사임비 등 수억원을 횡령해 이들 의원에 게 일부 정치자금 등으로 제공한 혐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협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보도한 두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형근 의원에게도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